

2020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목 차

▪ 임원 명단	_____	3
▪ 사무국 명단	_____	5
▪ 2020년 사업 보고		
(1) 주요활동지표	_____	6
(2) 2020년의 변화	_____	8
(3) 사무국 운영	_____	10
(4) 상담 및 사건 지원	_____	11
(5) 정책	_____	30
(6) 국제연대	_____	36
(7) 교육	_____	41
(8) 시민 참여	_____	43
(9)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_____	47
▪ 2020년 결산	_____	55
▪ 2020년 감사 보고	_____	58

임원

▣ 고문

- **김지형**
 - 前 대법관
 -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 **박경서**
 - 前 대한적십자사 회장
 - 초대 대한민국 UN 인권 대사
- **전수안**
 - 前 대법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이사장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 사단법인 ‘선’ 고문

▣ 운영위원

- **김인숙** (운영위원장, 법률사무소 ‘민들레’ 변호사)
- **강석민**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
- **강수정** (국립현대미술관 전시1과장)
-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임상부교수)
- **김종대** (제20재 국회의원, 現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
- **박인혜** ((사) 인천여성의전화 이사)
- **변영주** (영화감독)
-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
- **안미자**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 **이경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 **정상덕** (원불교 백년기념성업회 사무총장)
- **허남주** (前 서울신문 사업단장)

▣ 소장

- **임태훈** (2009 ~ 현재)

▣ 감사

- 정정훈 (‘지담법률회계세무사무소’ 대표 변호사)

▣ 정책위원

- 강화수 (前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 김철효 (시드니대학교 사회학 박사)
- 우종길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무관)
-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범수 (미래신경정신과 원장, 정신과 전문의)

▣ 실행위원

- 이상면 (비상근 캠페이너)
- 이인섭 (참여홍보 실행위원, 現 NPO지원센터 매니저)
- 김소명 (<나꿈> 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 책임실행위원, 임상심리사)
- 박신영 (<나꿈> 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 실행위원, 임상심리사)
- 차성이 (<나꿈> 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 실행위원, 임상심리사)
- 우재연 (<나꿈> 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보조 실행위원, 심리학 석사)

▣ 부설군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

- 조중신 (한국성폭력위기센터부설성폭력상담연구소 소장)
-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 이경환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부설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

- 김숙경 (2019 ~ 현재)

사무국

▣ 사무국

김형남

사무국장

▣ 기획정책팀

조규석

기획정책팀 간사

▣ 상담지원팀

방혜린

상담지원팀 팀장
성폭력전문상담원

윤선주

상담지원팀 간사
성폭력전문상담원

함성현

상담지원팀 간사

▣ 참여홍보팀

임상열

참여홍보팀 팀장
성폭력전문상담원

▣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성폭력전문상담원

2020년 사업 보고

I 주요 활동 지표

1. 상담

- 상담 접수 : 1,710건 (전년 대비 2.4% 상승)

상담 창구	건수
아미콜 상담전화	763
홈페이지 상담실	887
이메일	48
카카오톡	7
서신	3
기타	2

* 카카오톡 상담의 경우 상담 효과성을 위해 접수창구가 아닌 2차 상담용으로 활용 중입니다.

2. 후원

- 후원회원 : 1,254 명 (2019년 12월 31일 기준)

월	회원		후원금	
	회원 수 (명)	전월 대비 증가 (명)	월 총액 (원)	전월 대비 증가 (원)
1월	1312	28	22,051,550	708,000
2월	1323	11	22,303,550	252,000
3월	1303	-20	22,058,550	-245,000
4월	1301	-2	21,951,550	-107,000
5월	1305	4	22,113,050	161,500
6월	1303	-2	22,066,050	-47,000
7월	1296	-7	21,990,050	-76,000
8월	1286	-10	21,670,050	-320,000
9월	1274	-12	21,482,050	-188,000
10월	1273	-1	21,420,050	62,000
11월	1263	-10	21,402,050	-18,000
12월	1242	-21	21,067,050	-335,000
	1,242	-70	21,067,050	-984,500

※ 2020년 결산 ('20년 2월과 12월 비교) : - 81명 / - 1,236,500원

3. 언론

- 언론 노출 : 5,299 건

월	빈도
1월	1,160
2월	438
3월	278
4월	387
5월	317
6월	563
7월	610
8월	283
9월	310
10월	269
11월	328
12월	356

(참고: 본 통계에는 원칙적으로 뉴미디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언론사가 개설한 채널의 경우에는 반영하였습니다.)

II 2020년, 군인권센터가 만들어 낸 변화

■ 코로나-19, 군인권 상황 모니터링

사상 초유의 전염병 확산 속에 군대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군인들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통제와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가격리시설 확보 계획을 미흡하게 세웠다가 부랴부랴 간부 개인 숙소와 관사를 징발하는 일에 경종을 울렸고, 코로나19 성금을 장병들로부터 강제 각출 한 사건을 세상에 알려 바로잡았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영창 폐지 법안 통과 및 영창 제도 위헌법률심판사건 승소

군인권센터는 2013년 첫 헌법소원 제기 이래 꾸준히 억울하게 영창에 간 병사들을 법률지원해 왔습니다. 2012년 서울행정법원의 영창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헌법재판소는 판사의 영창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2020년 9월 마침내 영창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에 앞서 동년 1월에는 국회도 영창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 ‘2020 나눔과꿈’ 군 인권침해 피해자/유가족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 착수

군인권센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군 인권침해 피해자/유가족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는 군인권센터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개발, 시범운영의 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 프로그램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20 삼성전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꿈’ 기금 사업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회수 하사 복직 운동

2020년 1월, 대한민국 육군은 성확정 수술을 한 MTF 트랜스젠더 군인 변회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더 이상 남성의 성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전역의 근거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황당한 전역에 맞서 차별없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변 하사의 복직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1주년**

2020년 설립 1주년을 맞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연간 384건의 성폭행 피해사건을 상담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를 찾은 성폭력 피해자는 같은 기간 국방헬프콜을 찾은 피해자에 비해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군의 뿌리 깊은 성차별·성폭력·성희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진상 규명 지속**

영망으로 진행 된 계엄령 문건 수사, 검찰은 주범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잡아올 생각도, 의지도 없습니다. 군이 헌정질서를 짓밟으려 한 충격적인 사건, 수사기관이 방치한다고 그저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現 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관련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소하여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 **새로운 문제제기**

군인권센터는 올해에도 당연하게 여겨져 온 것들에 새로운 물음을 던졌습니다. ‘병사의 두발은 왜 간부보다 짧아야 하는가?’, ‘훈련병은 왜 휴식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가?’가 그것입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병사에 대한 과도한 두발 제한과 훈련병 휴대폰 사용 문제를 공식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인권의 시각으로 만든 새로운 물음, 반드시 변화로 이끌어하겠습니다.

III 사무국 운영

1. 사무국 현황

부서	직책	성명	비고
사무국	사무국장	김 형 남	
기획정책팀	간사	조 규 석	
상담지원팀	팀장	방 혜 린	
	간사	윤 선 주	
	간사	함 성 현	2020년 채용
참여홍보팀	팀장	임 상 열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	김 숙 경	

- 채용
상담지원팀 간사로 함성현을 신규 채용 하였습니다.

2. 사무국 활동

일시	활동
1/7-9	상반기 워크숍
2020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상반기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 재택근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일부 인원의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입
군인권센터는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년 나눔과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3명의 임상심리 전문가와 1명의 심리학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행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4 상담 및 사건 지원

1. 상담 분석

① 상담 창구별 분석

- 상담 접수 : 1,710건 (전년 대비 약 2.4% 상승)

상담 창구	건수	비율(%)
아미콜 상담전화	763	44.6
홈페이지 상담실	887	51.8
이메일	48	2.8
카카오톡	7	0.4
서신	3	0.2
기타	2	0.2

- 2019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사이버 상담실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현재 전체 상담 수의 절반 이상이 홈페이지 <상담하기> 창구를 이용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 장병 모바일 접근성을 고려하여 카카오톡 플러스채널을 통하여서도 상담 기능을 추가하였으나, 상담의 일방성 및 상담 효과 저조, 상담자 - 내담자 간 의사소통 비효율성, 플러스채널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2019년 시범 운영 후 2020년 하반기부터 카카오톡 상담은 2차 상담 창구로 활용 중입니다.

② 피해자 · 가해자 유형별 신분 분석

- 피해자 파악 사건 : 1,640건

피해자 유형	건수	비율(%)	2019년 비율
현역	1213	74	81.2
예비역	158	9.7	3.8
보충역	166	10	9.7
상근예비역	26	1.6	1.3
민간인	69	4.2	3.7
기타	7	0.5	0.3

* 대체복무역은 접수된 사건이 없었음.

■ 가해자 파악 사건 : 852건

가해자 유형	건수	비율(%)	2019년 비율
현역	654	76.7	86.1
예비역	42	5	1.5
민간인 (사회복무 근무지 등)	131	15.3	10.3
보충역	4	0.5	0.1
상근예비역	4	0.5	-
기타 (공무원 등)	17	2	2

* 대체복무역은 접수된 사건이 없었음.

- 예년과 마찬가지로 현역의 상담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예비역 상담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복무 당시의 권리침해에 대해 상담하려는 전역자들의 요구가 이어진 결과로 판단됩니다. 작년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상담은 전년과 비슷하게 접수되었습니다. 전체 의무복무 대상자 중 보충역 복무자의 비율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비율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 지표(가해자-민간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중 민간인은 군인이 가해자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또는 군내 직장 내 갑질 문제 피해자(군 내 민간 인력으로 계약직 근무원 등) 등이 해당합니다. 특히 비전투인력 민간인 채용이 늘면서 계약직 근무원과 전문군무경력관 등 민간인 근무자가 다수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침해 상담이 계속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내담자 소속 군별 분석

소속		2019년	2020년	증가율(%)
육군		987	1072	6%
해군		61	106	41%
공군		143	157	7%
해병대		35	55	35%
전환 복무	의무경찰	92	75	-25%
	의무소방	2	2	-2%
사회복무요원		161	164	0
기타 보충역, 대체복무역 (전문산업요원, 공보의 등등)		4	6	32%
기타		184	73	-158%
총계		1,669	1,710	

* 증가율은 총 상담증가분 고려 보정치로 계산함

- 전년도 상담결과 대비 올해는 해군과 해병대에서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해군의 경우 타군과 상담 유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주로 함정 및 격오지(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해군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출입통제와 생활 스트레스가 상담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해병대의 경우는 타군의 상담 경향과는 달리 집단 폭력, ‘악습’ 으로 대표되는 병영 부조리, 성추행 등 전근대적인 폭력 상황에 대한 상담이 급증한 상태입니다.
- 의무경찰의 경우 전년도 인원 감축 및 집회상황 증가 등으로 인해 근무 피로도, 휴식 미보장 문제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였으나, 올해는 집회 자체가 줄었고 사회복지요원이 경찰청에 복무 배치가 되며 상담 건수가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의무소방 및 의무경찰의 경우 전환복무 제도 폐지가 다가오고 있어 절대적인 상담의 수가 계속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④ 피해자 · 가해자 계급별 분석

- 피해자 계급 분석

전체	대분류	소분류	계급	인원	소분류 내 비율(%)	계 (전체 비율)		
현역	병사		훈련병	43	4.3	1,014 (61.8%)		
			이 병	34	3.3			
			일 병	174	17.2			
			상 병	190	18.7			
			병 장	206	20.3			
			병(전체)	367	36.2			
	후보생		(부)사관후보생	1	-	1 (0.1%)		
	간부	부사관 및 준사관		하 사	59	30.4	194 (11.8%)	301 (18.3%)
				중 사	48	24.8		
				상 사	20	10.3		
				원 사	2	1		
				준 위	0	0		
				부사관(전체)	65	33.5		
		장교		소 위	5	4.7	107 (6.5%)	
				중 위	29	27.1		
				대 위	43	40.2		
				소 령	5	4.6		
				중 령	2	1.9		
				대 령	0	0		
		장교(전체)	23	21.5				
		장성		준 장	0	-	0 (0%)	
소 장	0			-				
중 장	0			-				
대 장	0			-				
군무원				24	-	24 (1.4%)		
기타	군무원(계약직)			5	-	5 (0.3%)		
	기타			295	-	295 (18%)		
계						1,640		

* 의경, 의무소방은 각각 군 계급으로 환원하여 분석하였음.

* 계급을 상세히 밝히지 않은 자와 예비역은 출신 분류(병사, 부사관, 장교 등)에서 전체로 분류하였음.

* 사회복지요원 등 보충역, 민간인 및 계급 미 응답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는 기타로 분류하였음.

- 내담자 계급은 일병에서 병장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금년의 경우 오히려 병사의 계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경향이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① 최근 군 내 가혹 행위가 수직 위계에서 발생하는 폭력보다 점차 또래 집단 내 폭력으로 그 양상이 변하고 있고, ②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임무 부담과 눈치에서 자유로운 병장 계층이 상담에 더 적극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간부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사와 중사, 대위가 가장 높은 비율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최일선 부대의 중간 관리자 역할(분대장, 부소대장, 중대장)을 담당하는 점, 그리고 연차가 낮은 간부로서 겪는 근무 고충이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하사의 경우 계급과 연차에 따른 ‘차별’ 대우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향이 매우 짙었습니다.
- 가해자 계급 분석

전체	대분류	소분류	계급	인원	소분류 내 비율(%)	계 (전체 비율)		
현역	병사		훈련병	26	13.1	199 (23.4%)	414 (48.6%)	
			이 병	0	0			
			일 병	25	12.6			
			상 병	49	24.7			
			병 장	60	30			
			병(전체)	39	19.6			
		후보생	(부)사관후보생	0	0	0		
	간부	부사관 및 준사관		하 사	21	14.1		149 (17.5%)
				중 사	45	30.2		
				상 사	45	30.2		
				원 사	20	13.4		
				준 위	7	4.7		
				부사관(전체)	11	7.4		
		장교		소 위	5	2.1		243 (28.5%)
				중 위	21	8.6		
				대 위	65	26.7		
				소 령	28	11.5		
				중 령	57	23.5		
				대 령	17	7		
				장교(전체)	50	20.6		
		장성		준 장	10	45.4		22 (2.6%)
			소 장	8	36.5			
	중 장		3	13.6				
	대 장		1	4.5				
	군무원		19	-	19 (2.2%)			
기타	군무원(계약직)		4	-	4 (0.5%)			
	기타		216	-	216 (25.3%)			
계						852		

* 계급 분류 및 통계 방식은 피해자 계급 분석과 동일함.

-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 가해자 비율을 상호 분석하였을 때 병사 - 병사 간 인권침해 보다는 간부 - 병사 간, 또는 고급간부 - 초급간부 간 인권침해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병사 간 인권침해 발생에 대하여서는 계속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피해자의 계급 간 분포가 고르게 나온 대신 가해자로 지목된 계급은 상·병장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가해자 중 대위(중대장), 중령(대대장), 상사(행정보급관) 계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해당 계급이 일선 부대에서 실무를 도맡을 뿐 아니라 장병들의 고충 및 인권침해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직책에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금년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통제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고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 장병들이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고충을 많이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올해는 여단장 계급에 해당하는 준장 계급에 대하여서도 10건의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참고 : 피·가해자 계급 분포 비율 비교]

구분	2019년 1순위		2020년 1순위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병	일병(12.2%)	훈련병(25.1%)	병장(20.3%)	병장(30%)
부사관	하사(26.7%)	상사(31.5%)	하사(30.4%)	중, 상사(각 30.2%)
장교	대위(40.8%)	중령(26%)	대위(40.2%)	대위(26.7%)

⑤ 피해유형 별 분석

피해유형		2019년	2020년	증감률(%)
가혹행위(고문/악폐습)		91	82	-15.8
구타(상해/폭행)		86	96	4.25
언어폭력(모욕/폭언)		242	273	5.36
자의적구금(영창)		41	24	-45.3
그린캠프(블루캠프)		3	1	-68.8
피구금자 권리침해		5	2	-62.6
보훈/보상	보훈/보상(유공자/배상/공상)	65	73	4.89
	순직/공상	15	23	43.2
사망(자살/의문사/사고사)		21	24	6.7
의료사고/분쟁		29	3	-90.3
진료 미보장 등		131	112	-20.1
디지털성범죄		9	10	3.7
성폭력(강간/준강간/유사강간/의제강간)		3	16	398
성추행(강제추행 등)		52	44	-20.9
성희롱		44	55	16.7
차별	성차별	신설	4	-
	성소수자 차별	12	5	-61
균형법92조6		2	2	-6
병역거부/대체복무		5	5	-6
병영부조리 (불법명령/부당,사적지시/부패비리/왕따)		562	545	-9.42
복무부적응	부적응	58	58	-6.6
	부적합	61	41	-37.2
인사불이익		36	85	120
부당징계		63	59	-12.5
군수지원/복지		124	87	-34.7
사생활침해/통제		214	282	23
적법절차(피의자, 피징계자 권리)		25	23	-14
단순문의/의견개선		293	434	38.3
기타		155	152	-8.4
계		2,447	2,620	

* 피해유형은 1개 사건 당 중복 응답 가능함.

- 상담 접수건의 절대량이 적은 항목(그린캠프, 병역거부 등)을 제외하고 급격한 증감률을 보인 항목은 성폭력인데, 매년 접수율이 상승하고 있는 피해 유형입니다. 특히 올해는 장난을 빙자한 가벼운 추행(엉덩이 치기, 주무르기 등) 대신 보다 직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접수되었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서 비롯된 생활속 성희롱 또한 접수율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및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 계획이 요구됩니다.
- 과거 3대 폭력에 해당하였던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의 경우 매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 올해는 다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구타의 경우 계속 큰 폭으로 접수율이 떨어지고 있었으나, 올해 다시 오름세를 보여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2014년 故 윤 일병 사건 이후 대폭적인 병영문화혁신이 이루어진 지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 인사불이익과 사생활 침해는 주로 부대에서 지시되는 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해 유형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전체가 유래없는 재난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군대에서도 각종 지침과 규제가 두서없이 생성된 해이기도 합니다. 장기간 출타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불만 및 문의가 다른 상담에 비해 눈에 띄게 접수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병영 내 감염병 유행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탄력적인 부대 운용을 통해 장병의 스트레스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장기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⑥ 침해 권리별 분석

침해권리		2019년	2020년	증감률(%)
인격권 (행복추구권)	존엄 및 인격권 (행복추구권)	678	552	-19
생명권(안전)		98	187	88
건강권(보건/진료)		209	226	6.8
양심의 자유(종교/사상)		12	16	31.7
표현의 자유(언론/출판/학문/예술)		-	-	-
정보권(접근/비밀/통신)		98	69	-30
신체의 자유(거주/이전/구금)		31	101	221
사생활의 자유		138	211	51
참정권(집회/결사/정치적중립)		3	6	97.5
평등권		119	149	23.6
청구권(수사/재판/보훈 등)		255	243	-5.8
노동권 (휴식/복지/인사/근로)	노동권(복지/인사/근로)	316	217	-32
	휴식권	264	175	-34.5
경제권(임금 등)		21	11	-48.2
재산권(사유재산 등)		10	31	206
문화권 (교육/환경/의식주)	문화권(교육, 여가 등)	56	16	-717
	환경권	81	47	-42
	주거권	10	25	146
단순문의/의견개진		258	394	50
기타		118	133	11
계		2,775	2,809	

* 침해권리는 1개 사건 당 중복 응답 가능함.

- 피해유형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한 권리 분야에서 높은 상담 증가율이 보였습니다. 특히 신체의 자유는 사생활의 자유와 연결되는 침해권리 항목으로, 급작스럽게 통제된 출타와 휴가, 또 다수가 장기간 부대에 잔류하게 되었으나 시설 여건상 완벽하게 개인 공간을 가질 수 없는 부대환경 등으로 인한 생활공간 침해 등이 주요한 피해 호소 내용이었습니다.
- 생명권은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전사고나 사망 또는 질병뿐 아니라

높은 수위의 (성)폭력, 안전불감증에서 비롯한 근무 중 위험 환경 노출 등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이 분야는 사회복무요원 상담에서 많이 보이는 항목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상 위험업무 및 혐오업무에는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세부 규정은 전무한 관계로 자신의 직무가 위험 또는 혐오업무인지, 또는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사설 복지기관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해 문의하는 상담이 많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평등권은 꾸준히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주로 병사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와 규정의 차별성에 대한 호소가 주를 이루며, 특히 올해는 두발 규정과 관련한 상담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간부, 병사 간 차별적인 두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외에 간부 계급 중 가장 낮은 하사들에게만 암암리에 적용되는 관행(영내 숙소 강제 배정, 자차 이용 금지, 통장 및 신용카드 내역 확인 등) 그리고 기혼/미혼 간부 간 적용이 다른 제도(특히 출타 문제)에 대한 문의도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2. 상담지원팀 운영 현황

- 상담지원팀은 2020년 팀장 1명, 간사 2명으로 운영되었으며,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와 협조하여 함께 성폭력 상담지원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 2020년 간사 1명 신규 채용)
-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주간 상담회의 진행, DB 교차 관리 등을 통해 개별 사건의 상담 외에도 중점 모니터링 과제를 선별하여 상담을 진행하여 정책 발굴 및 제안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전년도 하반기부터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상담실 운영하여 전화상담보다도 온라인 상담이 더 많은 상담접수 창구가 되었습니다. 당초 상담효율 증대를 기대하였던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은 적시에 필요한 상담내용을 제공하기에 채팅 형식이라 부적절한 점,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자체에 대한 접근성 문제, 내담자-상담자 상호 모두 상담 집중력이 떨어지고 상담 흐름이 자주 끊기는 등 상담 자체의 효율은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자료요청 등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노동권 및 휴식권 등 사회권 영역의 상담이 전체 상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평등권에 대한 일반 장병들의 인식 수준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은 해마다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부분에서 병영문화 혁신이 이루어졌지만 사고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모니터링과 교육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2020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사업 선정에 따라 기존 상담 지원 데이터베이스 개편 사업을 진행하였고, 상반기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21년에는 새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이전이 마무리됩니다. 이를 통해서 접수된 상담에 대한 다양한 정량, 정성 분석 및 계급, 계층, 성별 등에 따른 교차 분석이 가능해져 보다 다양한 정책과제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주요 지원 사건 (방문 지원, 언론 보도, 법률 지원 등)

케이스	시기	소속	사건 유형	지원 방식	
1	트랜스젠더(MTF)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 법률 지원	2020. 1월	육군	성소수자차별 노동권침해	언론보도 법률, 의료지원
2	○사단 CCTV 근태감시	2020. 1월	육군	노동권침해	인권위 진정 (완료)
3	해병대1사단 병사 간 가혹행위 (잠자리사건)	2020. 1월	해병대	폭행 및 가혹행위	언론보도 법률지원
4	◇사령부 지연 퇴근 강요	2020. 2월	육군	노동권, 휴식권 침해	공문조치 (시정요구)
5	1사단 코로나 성금 관련 장병 금전 각출	2020. 3월	육군	재산권 침해	언론보도
6	3사단 대대장 병사대상 집단 열차려(가혹행위)	2020. 3월	육군	가혹행위	언론보도 법률지원
7	3사단 보복성 불시점검 (2차피해)	2020. 3월	육군	사생활침해	언론보도
8	계룡대 군사경찰대대 영내 집단구타	2020. 4월	국직	폭행 및 가혹행위	언론보도 의료지원
9	육군 미사일사령부 하극상 및 강제추행	2020. 4월	육군	성폭력 가혹행위	언론보도
10	◇정비창 군무원 초과근무 근로 기준 침해	2020. 5월	공군	노동권, 휴식권 침해	공문조치 (시정요구)
11	△사단 PCR 검사확인 중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2020. 5월	육군	사생활침해	공문조치 (시정요구)
12	공군 3여단 간부 성추행, 성희롱	2020. 6월	공군	성폭력 성희롱	언론보도
13	사회복무요원 온라인 직무교육 근무시간 포함 협조 요청	2020. 6월	보충역	노동권침해	공문조치 (시정요구)
14	○○부대 가혹행위 추정 자살	2020. 6월	육군	가혹행위 사망	법률지원
15	각 군 두발 규정 계급간 차별	2020. 9월	전군	평등권침해	인권위 진정 (진행)
16	□□부대 조리병 초과근무 업무분담 요청	2020. 9월	국직	노동권, 휴식권 침해	공문조치 (시정요구)
17	◇함대 폭발 사고 후 PTSD	2020. 9월	해군	재난/사고	의료지원
18	각 군 훈련소 훈련병 스마트폰 사용	2020. 10월	전군	평등권침해	인권위 진정 (진행)
19	□부대 코로나격리 중 부실식사 제공	2020. 10월	육군	건강권침해	언론보도
20	23사단 작전 포상 관련 계급 차별	2020. 11월	육군	평등권침해	언론보도
21	육군 자가격리시설 확보 관련 군 숙소 및 관사 징발	2020. 12월	육군	사생활침해	언론보도
22	□□부대 의무병 초과근무 조정 요청	2020. 12월	해병대	노동권, 휴식권 침해	공문조치 (시정요구)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관련 상담 분석

- 2020년은 유래없는 신종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유행 사태로 국가적 규모의 재난을 장기간 겪게 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군에서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지침이 수차례에 걸쳐 하달 및 수정 시달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또 국가적인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각 지역 보건소, 자가격리시설, 병원 등으로 많은 군 인력과 장비가 파견되는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높은 수준의 군 병력 통제가 이루어진 2020년 2월에서 4월 사이 접수된 상담만 556건으로, 2020년 전체 상담의 33%를 차지하였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감염병이 본격 유행하기 시작하였던 2020년 1월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감염병 상황에서 인권침해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상담 건 중 내담자 호소 내용이 직접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과 관련한 지침, 방침, 지시 등과 연결된 경우 ‘코로나 상담’ 항목으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하였습니다. 총 352건의 유효상담이 발생하였는데(전체 상담의 20.6%)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2021년에도 지속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래 통계 수치는 위 전체 상담 분석 통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소속 군별 분석

소속 유형	건수	비율(%)
육군	176	50
해군	23	6.5
공군	30	8.5
해병대	4	1.1
의무경찰(의무소방)	21	6.0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20	5.7
기타	78	22.2
합	352	100

* 기타 : 소속부대를 알려주지 않거나, 또는 주 피해호소자가 민간인 / 보충역인 경우.

② 계급 및 계층 분석

계층	건수	비율(%)	계급	건수	비율(%)
병사	192	54.5	이병	6	3.4
간부	117	33.2	일병	27	15.2
보충역	24	6.8	상병	33	18.5
군무원	4	1.1	병장	29	16.3
기타	15	4.3	부사관	60	33.7
합	352	100	장교	23	12.9
			합	178	100

* 기타 : 상담 시 계급을 밝히지 않거나 또는 민간인인 경우

** 합계 오차 발생 이유 : 내담자와 피해호소자가 다른 경우, 또는 특정 계급인 것을 밝히지 않는 경우로 인한 오차.

*** 간부의 경우 부사관, 장교의 계급 세부분석이 통계적 의미가 없어 제외함

③ 침해 권리별 분석

침해권리	건수	비율(%)
생명권	92	14.1
건강권	60	9.2
노동권	35	5.4
환경권	33	5.1
사생활의 자유	124	19.0
문화권	5	0.8
신체자유	55	8.4
정보권	19	2.9
주거권	17	2.6
참정권	3	0.5
청구권	5	0.8
평등권	57	8.8
휴식권	53	8.1
경제권	8	1.2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37	5.7
재산권	11	1.7
양심의 자유	1	0.2
단순 문의	36	5.5
합계	651	100

* 침해권리는 1개 사건 당 중복 응답 가능함.

** 침해권리 카테고리는 '실제 발생한 침해 행위와 '침해라고 판단하는 행위'가 함께 고려된 수치임.

④ 소속군별 침해 권리 분석

침해권리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의경(방)	보충역	기타	합계
생명권	53	1	4	1	14	8	11	92
건강권	28	3	7	1	7	4	10	60
노동권	10	3	3	1	3	6	9	35
환경권	11	4	3	0	6	3	6	33
사생활의 자유	59	8	16	1	6	1	33	124
문화권	2	0	1	0	1	0	1	5
신체자유	29	6	5	1	4	0	10	55
정보권	8	0	2	0	1	0	8	19
주거권	8	3	1	1	0	0	4	17
참정권	2	0	1	0	0	0	0	3
청구권	3	0		0	0	1	1	5
평등권	28	1	7	1	7	1	12	57
휴식권	28	5	8	2	1	0	9	53
경제권	2	1	0	1	0	0	4	8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15	4	3	0	0	3	12	37
재산권	5	2	2	0	0	0	2	11
양심의 자유	0	0	1	0	0	0	0	1
단순 문의	13	2	1	2	1	5	12	36
합계	304	43	65	12	51	32	144	651

* 침해권리는 1개 사건 당 중복 응답 가능함.

-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침해당한 것으로 호소된 권리는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이 제한되고, 출타 인원에 대하여 일일 방문 지역을 확인하고 별도의 격리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강도 높은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상황들이라고 추측됩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소속과 상관없이 대체로 높은 비율로 침해를 호소한 권리입니다.

사생활 침해 상담사례 1)

내담자는 공군 00비행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군 간부임. 공군 특성상 독신자숙소가 영내에 위치한 형태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업무시간 외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면서 간단한 병원진료도 가기 힘든 상황을 호소하였음. 특히 해당 여군의 경우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 이었는데, 부대장이 병원 진료를 위한 출타 보고 시 상세 진료과목 및 병명을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고 있었음.

사생활 침해 상담사례 2)

내담자는 00부대 상근예비역으로 근무 중인 병사임. 부대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퇴근 후 개인적인 약속, 밀집 장소 방문 등을 금지할 것을 지시함. 그러나 부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근예비역 병사 개인 스마트폰에 GPS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뒤, 동선 기록(로그)을 남게 하여 지휘관에게 제출할 것을 지시함.

- 생명권 관련 상담은 총계에서는 2순위를 차지하였으나, 소속 군별로는 편차가 상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생명권과 관련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의무경찰과 보충역(사회복무역)으로, 영내생활이 대부분인 현역 군인과 달리 대민 접촉이 많은 근무 특성 때문에 판단됩니다. 의무경찰은 집회 현장출동으로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 출입인원 확인과 관련한 상담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생명권 침해 상담사례 1)

내담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임. 의료기관에는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요원들이 마스크만 쓴 상태로 사전 출입등록(체온 확인, 명부 작성 등) 작업을 도맡아 하는 것은 사회복지요원을 1차적인 감염 위험에 노출 시키는 상황이 아닌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함.

생명권 침해 상담사례 2)

내담자는 00경찰서에서 의경으로 근무하고 있음. 8. 15. 광화문 시위 당시 현장 경력지원을 다녀왔는데,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이 되어 상담을 요청함. 내담자는 앞으로 의경 근무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수도 없이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할텐데, 지휘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거나 하다못해 격려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함.

- 건강권은 생명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인 의료적 사항에 대한 요구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청원휴가의 제한과 각 군 병원이 집중치료시설로 지정됨에 따른 진료 지연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 격리자에 대한 미진한 지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건강권 침해 상담사례 1)

내담자는 00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병사)을 둔 부모임. 아들이 부대에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러 인대 파열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가장 가까운 국군00병원이 코로나19 전담 치료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진료가 지연되고 있음. 외부 민간병원을 이용하려고 해도 위치 여건 및 현재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고려해 당일 진료가 어려운 상황인데 부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 조치로 청원휴가는 제한된다는 지침만 안내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에 대해 상담 요청함.

건강권 침해 상담사례 2)

* 2020. 10. 2. 보도

일부 부대에서 휴가 후 동일집단 격리 중인 병사들에게 기존 영내 장병에게 제공된 급식 중 남은 양만으로 도시락을 만들어 부실한 식사가 제공 되는 등의 일이 발생함. 보도 이후에도 동일한 사례의 상담이 다수 있었으며, 이외 식수가 제때 제공되지 않아서 물을 못 마시거나 격리 공간이 부족해 폐건물을 정비해 격리시설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난방, 온수 등이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일 등이 상담으로 접수되었음.

④ 계층 및 계급별 침해 권리 분석

침해권리	병사	간부	보충역	군무원	기타	합계
생명권	67	12	11	0	2	92
건강권	43	12	4	0	1	60
노동권	12	11	7	1	4	35
환경권	20	8	4	0	1	33
사생활의 자유	57	57	3	2	5	124
문화권	2	3	0	0	0	5
신체의 자유	25	26	0	2	2	55
정보권	8	8	0	0	3	19
주거권	4	11	0	1	1	17
참정권	1	1	0	0	1	3
청구권	2	2	1	0	0	5
평등권	32	23	2	0	0	57
휴식권	31	18	0	1	3	53
경제권	2	6	0	0	0	8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15	1	4	1	2	37
재산권	1	8	0	1	0	36
양심의 자유	1	0	1	0	0	1
단순 문의	24	4	5	0	3	11
합계	347	225	42	9	28	651

침해권리	이병	일병	상병	병장	부사관	장교	합계
생명권	5	9	11	9	6	2	42
건강권	0	3	10	4	8	1	26
노동권	0	0	1	3	7	3	14
환경권	0	0	3	2	5	1	11
사생활의 자유	1	8	10	7	27	9	62
문화권	0	0	0	0	2	1	3
신체의 자유	0	1	3	0	11	8	28
정보권	0	2	0	5	3	4	11
주거권	0	0	0	2	8	1	11
참정권	0	1	0	2	1	0	2
청구권	0	0	0	0	0	1	1
평등권	0	2	5	7	13	4	31
휴식권	1	6	8	8	5	5	33
경제권	0	1	0	0	3	2	6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0	2	0	2	8	3	15
재산권	0	0	0	1	6	1	8
양심의 자유	0	0	0	1	0	0	1
단순 문의	0	3	4	4	1	1	13
합계	7	38	55	57	114	47	318

-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상담은 사생활의 자유, 생명권 침해에 관련한 사항이 많았지만 각자 어느 침해 상황을 더 민감하게 여기는지는 복무 계층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침해를 호소하는 유형이었으나, 전체 대비 간부인 경우가 가장 높은 상담 비율을 보였고, 생명권 부분에서는 보충역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감성은 계급별로 나타난 상담을 보면 그 결과가 더 확연해집니다. 특히 부사관의 경우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한 출타통제 지침과 지시가 자신의 사생활을 극심히 침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초급 부사관의 많은 수가 영내 숙소를 이용하는 만큼, 영외 숙소에 거주자 또는 기혼자의 수가 많은 고급간부와의 차별적 지침 적용에 불만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경우 사생활보다는 생명권과 관련해 더 반응이 높았는데, 24시간 내내 영내에서 집단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점이나 코로나19가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우선되는 현재의 군대 분위기 자체를 자신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계급 간 차별 관련 상담사례 1)</p> <p>군은 자가격리자 시설 확보를 위해 간부 개인 거주시설인 독신자숙소(BOQ, BEQ)를 징발하여 자가격리시설로 이용하였음. 기존 거주자들은 다른 관사 거주자에게 얹혀살거나, 이마저도 확보가 안 되는 경우 '영내'에서 생활하도록 지시함. 상대적으로 계급이 낮은 초급간부들이 사는 독신자숙소만 우선순위로 징발하고 기혼관사는 후순위로 징발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였음.</p>	<p>* 2020. 12. 17. 보도</p>
<p>계급 간 차별 관련 상담사례 2)</p> <p>내담자는 공군 00사령부에 근무하는 간부임. 해당 부대는 영외 / 영내숙소 간부들에게 서로 다른 휴가 지침을 적용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초급간부 위주인 영내숙소 이용 간부들은 생필품 구매 목적의 영외 출타는 일주일에 한 번 허가되고, 응급진료 등 불가피한 목적 이외의 외출은 제한됨. 고급장교 위주인 영외숙소(기혼) 간부들은 영외 출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출타'에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 코로나 감염증 예방보다 지휘관의 통제 편의에만 맞춘 이상한 출타, 휴가 지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상담 요청함.</p>	

- 병사들의 경우 생명권, 건강권, 사생활의 자유 사이에서 큰 편차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간부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침해 호소 유형이 사생활의 자유에 집중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순위에 대해서는 부사관과 장교의 답변이 같았는데, 평등과 관련하여서는 부사관이 높은 반응을 보였고, 장교의 경우 평등권 보다는 사생활 침해와 유사한 침해 유형인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해 많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⑤ 결론

- 코로나19는 비단 군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하여서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고, 우리 사회는 때로는 공공 보건을 위해서 강도 높은 통제 정책을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방역 상황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 강한 통제를 통해 집단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증명된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언제까지 통제 일변도의 상황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특히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 행사는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은 자칫하면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왔던 병영문화 혁신의 자율기반 성과들을 다시금 통제라는 이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저가 될 수 있습니다.
- 연초에는 강도 높은 통제가 갑작스레 진행되어 상담 건수가 급증하였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통제 지침들이 자리잡은 후부터는 다시 상담 분포가 안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담을 진행한 장병들이 제기한 요구는 통제의 해제 그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높은 통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으로 이어졌습니다.
- 특히 소속된 부대, 소속부대의 물리적·조직적 위치, 각자의 신분과 계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지침에 대한 불만은 모든 상담 내용 전반에서 드러났습니다.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혼인 관계나 또는 가족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지침 적용은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대 내 방역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덜 노력하는 것이 없는데, 노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방역 외의 다른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 각계에서는 2021년도 20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방역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전례없는’ 해였다면, 2021년은 20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상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공익사건 지원 사업

- 군인권센터는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2020년 나눔과꿈> 사업 예산을 통해 적극적 법률 및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군인권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법률지원은 7명에게 8건을 지원하였으며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건은 피해자 승소, 1건은 피해자가 유리하게 합의하여 종결되었으며 나머지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및 수사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2021년도에 계속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의료지원은 7명에게 총 4,483,400원을 지원하여 정신과 진료, 심리상담, 의약품 조제비용 등을 충당하였습니다.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만족도 설문 및 과정평가를 유선으로 진행했습니다.



피해 종류	지원 유형	지원 기간	비고
성폭력	법률 지원	2020.03.27.~2021.01.18.	
차별	의료 지원	2020.04.13.~12.31.	법률지원 별도기금
사망	법률 지원	2020.06.24.~	유가족
성폭력	법률, 의료 지원	2020.07.07.~	
성폭력	법률 지원	2020.09.28.~	여군
사고 후유증	의료 지원	2020.10.15.~	
성폭력	법률, 의료 지원	2020.10.29.~	
성폭력	의료 지원	2020.12.01.~	
구타, 성폭력	법률 지원	2020.12.28.~	

* 지원기간 시작일은 지원결정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초 상담일과는 다름.

6. 군 트라우마 치유 사업

- 설립 10년 동안 많은 피해자 분들과 (유)가족을 만났고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전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사건의 해결과 시급한 의료적 요구는 지원해 드렸으나 사후 심리·정서적 돌봄은 군인권센터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 영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사랑의열매의 <2020년 나눔과꿈> 사업에 응모하여 예산을 확보, 2020년 하반기부터 ‘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분의 실행위원과 여러 감수, 자문위원과 군인권 피해자 활동가들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1단계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습니다.
- 1단계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인권침해 피해자, 경미한 PTSD(의증) 피해자, 그리고 2021년도에 개발될 2단계 프로그램의 선행절차로서 총 5회기(50분/회)로 개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다소 지연된 바, 2021년도 상반기에 1단계 프로그램 시범운용을 완수하고, 2단계 개발까지 하반기 내에 완성하여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의 사후 관리까지 돌봐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군인권센터는 유관 기관과 단체 등 여러 전문가들과 연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장병 기본권 증진 사업

- 군인권센터는 장병 기본권 보장의 제도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위배 되는 반인권적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연구 사업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사법기관의 인권보장역량 종합평가 연구(III): 형사법원의 인권보장역량 평가 연구보고서

군인권센터는 2019년에 이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군사법원’의 인권보장 역량에 관한 평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위헌이라고 지적된 심판관 제도(비법조인의 재판 관여), 관할관제도(삼권분립), 관할관확인조치제도(행정관료의 감경권)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고등군사법원의 ‘군사법원 연감’ (2017~2019)을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군사법원과 군사법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군사법제도가 가진 인권보장 역량상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하여 취해야 할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장병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연구용역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하여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은 군의료체계 연구 사업에 공동연구원, 집필 등으로 합류하여 국군 장병의 의료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큰 상황 속에서 약 800여 명의 장병에게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육군 전후방 부대 각 1곳, 해군 함대 1곳, 공군 비행단 2곳, 해병대 부대 1곳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2013년 인권위 연구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장병의 의료권 보장이 미흡한 지점, 특히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여전함을 재확인했고, 그 주요한 원인이 과중한 업무부담 등에 따른 소위 ‘눈치보기’와 경직된 ‘군사문화’의 조합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2] 제도 개선 사업

1) 영창 제도 폐지 및 영창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승소

군인권센터는 2020년 제도 개선 사업의 오랜 숙원인 영창 제도 폐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센터는 오랜 시간 영창 제도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아울러 억울하게 영창에 갇혀 징계를 받은 병사들을 상대로 공익법률지원¹⁾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로 헌법재판소에 영창 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마침내 국회는 2020년 1월 9일,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영창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2020. 9. 24.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2017헌바517) 헌법재판소는 영창 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법정 의견으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보충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다수 의견이 위헌 의견인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부터 4년 만입니다.

영창 제도는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005년부터 위헌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온 제도로, 독립적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합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역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창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왔습니다.

2020년 영창 폐지로 인해 건국 이래 지속된 영창 제도의 위헌성 논란은 입법자의 결단 뿐 아니라 사법적 결단으로도 위헌임이 완전히 결론지어졌습니다. 다만 그간 위헌적 제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후로도 병사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창을 대체하여 새롭게 생긴 징계 별목인 군기교육대의 운영 과정 역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추진

군인권센터는 2020. 10. 19.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방부의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헌법’ 제11조, 제39조에 위배되는 차별에 해당하며, 통신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18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사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협조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휴대전화 사용이 시범운영 기간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전면 시행의 단계로 접어들었으나 훈련병은 예외였습니다.

통상 낮은 환경을 처음 접한 훈련병들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병사들의 가족들이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는 시기 역시 신병 훈련 기간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족,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병력 운용과 훈련 사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병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기본권 제한임에도 근거 법률이 없어 위헌적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훈련병들에게도 일반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훈련 및 교육, 취침시간을 제외한 개인정비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끔 현행 제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센터는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은 물론,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 제한 해제 등의 추가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1) 공익법률지원은 민들레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 태평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 간부-병사 간 차별적 두발규정 개정 추진

군인권센터는 다수의 장병들이 상담을 통해 병사-간부 간의 두발 규정 차이가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행 두발 규정은 명확한 근거 없이 두발 등 신체의 자유를 계급에 따라 차등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센터는 2020. 9. 14.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병사-간부 간 차별적 두발규정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현행 규정 상으로는 ‘간부 표준형’ 두발규정이 병사의 두발규정과 상이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일정 정도의 두발 규정이 필요함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계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병사에 대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진정 조사는 지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4)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비판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2020. 12. 1. 자로 BMI, 근시, 편평족의 현역 입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하여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칙 개정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수가 줄어들어 따라 현역병 판정 요건을 완화하여 현역 판정률을 88%까지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현역 복무 대상자 감소 문제가 지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역판정률을 높이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사람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무작정 입대시키기 시작하면 입대예정자들의 부담은 물론, 일선 부대 지휘관들의 지휘 부담도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징-모 혼합제도의 병역 제도 개편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검토, 준비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의 비대한 상부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군대 내 소수자 인권 증진 사업

1)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복직 지원

군인권센터는 한국군 최초로 현역 신분으로 커밍아웃 한 뒤 성별정정수술(SRS) 까지 마친 MTF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첫 상담 당시 ‘성별정정 후 계속 군인으로서 복무를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으로 시작된 지원은 변희수 하사가 부대에 본인의 정체성을 밝힌 후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수술 목적의 사적국외여행 허가를 득해 한국으로 복귀하는 과정까지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0. 1. 22. 군은 갑작스럽게 전역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변희수 하사를 강제 전역시켰습니다.

변 하사는 우리 군에도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외침을 전했습니다. 군은 트랜스젠더가 차별

받지 않고 군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군인들과 함께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고민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의 인식 체계는 여전히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결코 어렵게 여겨 말도 안 되는 위법한 이유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붙인 뒤 전역시킨 1년 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강제전역 이후 20개 인권·시민사회단체²⁾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변희수 하사의 복직을 위해 법률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변호사들과 변호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성 직후 복직을 위한 인사소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유엔 등 국제사회에의 호소 등 가용한 침해 구제 수단을 모두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인사소청의 경우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2020. 7. 3. 인사소청을 기각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1. 21. 변 하사의 강제 전역 1일 전에 전역심사위원회 연기를 권고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내렸으나 육군본부가 이를 무시했고, 2020. 12. 14.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강제 전역이 인권침해임으로 복직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이스라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수술 비용, 호르몬 치료, 성형수술 비용 등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군이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은 2020. 7. 29.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Victor Madrigal-Borloz),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Dainius Puras),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Joseph Cannataci),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 (Elizabeth Broderick)의 명의로 대한민국 정부 앞으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에 관한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들은 변 하사가 강제 전역 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부당한 전역 조치의 즉각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 위반 사항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처럼 군대 내 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과 단체,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더하여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변 하사 강제전역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고,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2021년 2월, 변희수 하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덧붙여 전합니다. 센터와 공대위, 변호인단은 변 하사님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과 운동을 이어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복직 소송은 변희수 하사의 부모님께서 수계를 신청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희수 하사의 부모님께서 변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장례비용을 제외한 조의금 전액을 기부하셨습니다. 그 뜻을 받아 반드시 변 하사님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이뤄내겠습니다.

2)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단위 (가나다순)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무지개예수 / 서강대학교 성소수자협의회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명동 / 트랜스해방전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 국방 개혁 및 공익 증진

- 군인권센터는 대한민국 국군을 ‘민주적 통제를 받는 시민의 군대’로 만들기 위하여 군, 또는 군과 관련한 인사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위를 감시하고 규탄하였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 현충원 안장 친일파 군인 이장 촉구 운동 및 육군의 故 백선엽 사망 조기계양 비판

일본제국주의 무장세력과 기존 대한제국을 넘어서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자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친일매국 반인도주의 범죄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현충원에 묻힌 56명의 친일군인(『친일인명사전』 기준)의 명단을 정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14명은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자들로 해당 무장집단이 당시 국제인도주의법(전쟁법)을 무시하고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점 등에 비춰 단지 친일매국의 죄 뿐 아니라 반인도주의 범죄자였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정권에 부역한 자들로서 군인권센터는 이들을 함께 현충시설에 안치하는 것은 ‘보훈’의 정신에 반하며 법률을 개정하여 하루빨리 이들을 이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7월 11일 간도특설대에 복무하며 수많은 동포들을 죽인 故 백선엽이 사망하자 현충원에 안장하고 육군장으로 장사를 지내게 됨에 따라 군 부대가 조기를 계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아무리 현행 법률상, 절차적으로 故 백 씨가 해당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광복군 소탕에 앞장선 전쟁범죄자에게 예포를 발사하는 것은 국군이 광복군이 아닌 일본 제국주의의 황군을 모태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국군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현충원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故 백 씨와 나머지 친일파의 이장을 촉구했습니다.

2)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및 헌법소원

군인권센터는 2019. 4. 8.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중 이은재 의원이 군인권센터가 군부대를 방문해 인권침해 피해자 면담 등을 진행한 것에 대해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게 첩보 등을 문의한 사실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국회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①항’을 근거로 해당 사실이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비공개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 안전 보장과는 상관 없는 내용만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을 과잉금지 원칙 위배로, 이미 이은재 의원이 자신의 발언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의 답변을 언론에 공개하였음에도 공개하지 아니한 점을 부당하다고 꼽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 7. 24. 서울행정법원 제1부(안중화, 고준홍, 황용남)은 회의록 내용 중 기밀과 기밀이 아닌 바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기각시켰습니다. 국회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외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함께 국회법 제54조의2 제①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3) 북한군의 서해상 민간인 살해 및 시신 훼손 규탄

군인권센터는 2020. 9. 21. 실종된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사격한 뒤 시신을 훼손, 또는 유기한 데 대하여 남북한이 가입한 국제조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자 제네바협약(제4협약)’ 위반임을 지적하고 북한 당국을 비판하였습니다. 센터는 사망자가 조난 상태에 놓인 이유, 또는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경위 등은 부차적인 문제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북한군이 ‘제4협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데 대해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최고대표 서울사무소에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하였습니다.

1. UN 인권체계 등 국제협력 사업

1)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군인권센터는 2017년 육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소수자 장병 색출 사건에 대하여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의 인권전문가들에게 긴급청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UN 성소수자 독립전문가,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자의적구금 실무위원회가 공동으로 긴급조치 서한을 2017년 8월 발송하였습니다(UA KOR 2/2017). 군인권센터는 이후에도 2019년, 2020년 계속하여 변화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UN에 정보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 최초로 균형법상 추행죄(舊 계간)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개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2019년 해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이 발생하여 이 또한 UN 특별절차에 정보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2020년에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3월 초순 한 인권옹호자가 육군 최초 성전환(MTF) 하사 강제전역 사건을 UN 특별절차에 진정하였습니다. 이에 3월 중순 UN에서 추가정보를 군인권센터 등으로 요청한 바, 3월 25일 관련 정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UN 성소수자 독립전문가, 건강권 특별보고관, 사생활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 차별 실무위원회는 7월 29일 대한민국 정부에게 공개 혐의서한을 발송하였으며 불임을 통해 변 하사의 강제전역이 국제인권법에 명백히 위반함을 설명하였습니다(AL KOR 4/2020). 다만,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답변을 9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관련하여 성소수자 특보는 장례 기간중 개인 트위터에 조의를 표했으며 2021년 3월 15일 공식조문 또한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2013년도와 마찬가지로 북 관련 사건에 대하여도 UN에 긴급청원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8일 故 장성택의 자의적, 약식 처형에 대한 사건을 UN에 보고한 바 있고, UN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하 ‘北’)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비사법적 약식 처형 특별보고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등이 장성택 외 2인의 처형에 관한 혐의서한을 12월 17일 발송한 바 있습니다(AL PRK 1/2013).³⁾ 2020년 9월에는 비극적이게도 한 민간인(공무원)이 서해상에서 北의 군사 세력에 의하여 제네바협약 등이 무시된 채 피살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에 관해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北 인권상황 특별보고관과 약식 처형 특별보고관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민국과 北 양측에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을 발송하였습니다.⁴⁾ 특보들은 별첨을 통해 우리 정부에게는 관련 사건의 진실에 관한 조사의 중요성과 유가족의 참여 등이 국제법상 권리임을 명시했고, 북측 정권에 대하여는 무력의 사용은 국제법상 최후의 수단일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군인권센터는 한 인권옹호자가 개인 자격으로 2020년 낙태죄 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UN 특별절차에 발송하는 작업을 조력하였습니다. UN 여성과 소녀 차별 실무위원회, 건강권 특별보고관, 여성 폭력 특별보고관은 이에 2020년 12월 29일 기타서한을 발송하여 정책 및 법률(안)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설명을 대한민국 정부에

3) 해당 서한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누리집 자료실에 공개하였습니다.

4) 우리 정부는 2021년 1월 15일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요청하였습니다(OL KOR 8/2020). 군인권센터는 이 역시 국문으로 번역하여 관련 단체와 해당 인권 옹호자와 공유하였습니다.

2) UN 인권조약기구: 개인통보

한편 군인권센터는 2020년 5월과 6월 각 2012년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 두 분(이 대위, 이 중사)과 2014년 발생한 민간인 군사재판(감치) 피해자 두 분의 사건에 대해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을 제기하였습니다.⁵⁾ 이는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에 반하는 인권침해가 군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배상이나 시정조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국제연합 총회가 채택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권리가 침해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배상하고, 지연된 정의를 구현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국제연대 활동

1) 미합중국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 작성 협조 등

미국 국무부는 2019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2020년 3월 발표하였고 군인권센터는 그 다음날 전 자우편을 통해 일부 법령 명칭 등에서 오기가 발견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8월에는 신임 정치과 외교관 부임에 따라 2020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에 대하여 정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주한 미국 대사관 측으로부터 11월 추가 질의가 있어서 이에 응답하였습니다.

2) UN 인권규범 문헌 한역

군인권센터는 필요에 따라 UN 등이 채택한 국제인권규범 문헌을 번역하여 누리집 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어서 북한군의 약식 처형에 관련하여 (1) 1989년 초법·자의·약식 처형의 방지 및 조사 원칙(Principles on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f Extra-legal, Arbitrary and Summary Executions)을 번역하였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적정한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하여 (2) ~ (5) 1985년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Declaration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2005년 인권침해 피해배상 권리장전(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⁶⁾ 자유권선택의정서상 배상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measures of reparation under the OP-ICCPR),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 심의 10호: 자의적구금 피해자에 대한 보상 (Deliberation No. 10 on reparations for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도 번역하였습니다. (6) 덧붙여 네 건의 개인통보를 제출한 바, 자유

5) 각 국제인권조약은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조약기구(Treaty Body)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구는 조약 해설(일반논평, General Comment), 조약이행 감시(국가보고, State reporting)를 담당하며 선택의정서 등을 통하여 개별 시민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심의한 후 가해 국가에게 권고(견해, View)를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금에 관하여 수차례 개인통보 권고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6) 기본원칙의 본문(채택결의안 붙임)은 군인권센터 정책위원 이재승 교수님이 하신 번역을 허락 하에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권규약위원회가 2019년 도입한 신규 규범인 제3자의견서(amicus curiae) 제출 지침도 번역하였습니다(CCPR/C/3/Rev.11). 이외에도 군인권센터는 (7)-(8) 2020년 3월 사생활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연례 보고서 중 각 국 정부의 군 당국이 LGBTQI의 차별 등을 방지할 것을 권고한 내용(A/HRC/43/52)과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주제: 심리고문)의 결론 및 권고부분(A/HRC/43/49)만을 발췌하여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9) 2014년 군사법원에 대한 UN 전문가 자문회의의 발제문 일부(사법권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발제문) 또한 번역하였습니다.

3) UN 인권조약기구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1] UN 자유권규약위원회 제5차 대한민국 심의 대응

군인권센터는 5월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가보고서 초안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하게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2호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실한 내용의 문제, 번역 오류, 부실한 통계자료 및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정책 소개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7월 20일 8개의 의견에 대해 2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분수용(자살예방, LGBT인권교육, 대체복무제 현황) 및 불수용(자살예방, 대체복무제 범위, 영창, 진정의 기밀유지 현황)하였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용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화(개념정의)에 의견없음을 답신하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UN이 요구한 기한(8월 7일)보다 다소 늦은 9월 17일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대응

군인권센터는 1월 22일 인권위 보고서 작성 실무 자문회의에 타 NGO공동사무국 활동가들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이후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NGO연합보고서 참여와 동시에 1월 27일 단독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2020년 6월 9일 사전 쟁점목록(LoIPR)을 채택하였으며 2021년 5월 12일까지 국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쟁점목록(CAT/C/KOR/QPR/6)은 다음과 같습니다.

센터 제안	CAT 질의	센터 제안	CAT 질의
-	고문/가혹행위 진정사건 수사 및 조사결과	배상/보상	타 질의에 전제됨
군내 폭력 및 불처벌	성적, 물리, 언어학대 근절 및 무관용 조치	성소수자 차별	군형법 92-6 폐지 심의 조치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 설치 유무, 법안 등에서의 보호관의 조사권 등 권능 및 지위	피해자 배상 및 보상	국방부 인권자문위/국방헬프콜 활동 및 2017년 군인권상황실태조사 결과
군인 자살	자살 억제 및 책임자 처벌 조치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면	미채택
군법무관 독립성	비법조인인 군인의 군사재판 관여 여부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갑질)	미채택
자의적 구금(영창)	자의적 구금 제도 현황 및 군기훈련/교육 정보	인권옹호자 탄압	미채택
군형법상 사형	사형 폐지(일반론)	군 인권교육	인권교육(일반론)

1. 군 인권교육 공동 모니터링 사업

- 군인권센터는 군 인권교육 훈령이 제정된 이래 부침을 겪은 군 인권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과 인권교육 원칙에 비춰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사업을 기획하여 인권교육센터 ‘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선에서 군의 인권교육을 책임지고, 부대 인권상담관 역할을 겸하고 있는 ‘군인권교관’의 양성과정을 점검하는 것이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역량강화과정’과 ‘심화과정’을 참관하였습니다.
- 2020년 상반기에는 위 세 단체와 함께 2016년 국방부가 개정한 『국군 인권교육 교재』를 분석하고 2008년판 교재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29일 이를 정리한 3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국방부 법무관리관, 인권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운영팀 등에 민원으로 접수하였습니다.
- 해당 의견서에서 위 3개 인권단체는 우선 군인권교관 양성과정에 대해서 1) 교강사 간 강의 내용이 충돌되거나 동일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일을 줄이고, 보다 인권교육의 관점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강사가 교육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기획, 운영, 평가 단계에서 시민사회와 협치할 필요가 있고, 2) 이분법은 단순명료한 논리이나 인권은 단순히 실정법의 한계 내에서만 작용하지 않으므로 내용의 측면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기계적 개념 구분을 탈피하여야 하며 또한, 3)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하고, 4) 훈령상 지휘관 및 간부를 대상으로도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이를 대비한 학습경험도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어서 『국군 인권교육 교재』(2016)을 분석한 결과로, 1)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군인권교육의 정당화 과정에서 ‘전투력 강화’는 군 인권교육의 주된 목표가 아니며 부차적 효과임을 명확히 하고, 2) 인권교육에서는 지휘권의 ‘절대성’ 강조가 아니라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3-1) 구타를 유발한다는 표현(예: **원인 제공자**)이 규정상 존재하더라도 이를 12년 넘게 교재에 담을 때에는 인권 측면에서 보완할 사항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3-2) 구타의 ‘동기’를 구분하는 것(예: **사적 감정이 앞선 경우**)이 취지와 관계없이 가해자에게 그럴싸한 ‘이유’를 제공할 뿐이므로 보완해야 하고, 4) 인권침해가 국가재정에 손상을 초래한다는 표현은 인권을 자본화한 것이고, 피해자를 비인간화하는 것이므로 삭제하고, 5-1) 군내 성폭력 문제를 다룰 때에는 교재가 강박적으로 강조하는 군의 ‘상명하복’이 원인임을 지적해야 하고, 5-2) 스포츠 등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발상은 가해자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건전한 신체의 욕구’로 포장하는 것이자 여성혐오임과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전제하는 생각이므로 삭제해야 하고, 6) 사적지시 ‘거부요령’의 예시가 비현실적이고 부당하게 피해자에게 부담을 전가(예: **상급자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하므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내부 연수 및 외부 강의 등

시기		교육명	대상자	강의자
월	일			
2	5-6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국가예산교육)	김형남	나라살림연구소
2	24	<나눔과꿈> 단체자문	군인권센터	김진숙 교수
4	17	<나눔과꿈> 서면자문	군인권센터	김진숙 교수
5	12-14	국회 보좌진 역량강화 교육(국가예산교육)	김형남, 조규석	나라살림연구소
5	27	고양시성폭력상담소 군사법제도 특강	활동가	임태훈, 김형남
8	6	삼척중학교 군인권 특강	중학교 2학년	김형남
12	22	군인권 세미나 특강 1, 2	실행위원	김형남, 방혜린

※ 내부 연수는 모두 군인권센터 예산을 지원하여 진행하였으며 국방예산 감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실행위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은 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인권감수성을 반영하고 개발진의 군 인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2/24자 자문은 <나눔과꿈> 예산에서, 4/17자 자문은 사랑의열매에서 부담하였습니다.

8 시민 참여

1. 후원 현황

1) CMS전체회원 : **1,242명** (2020. 12.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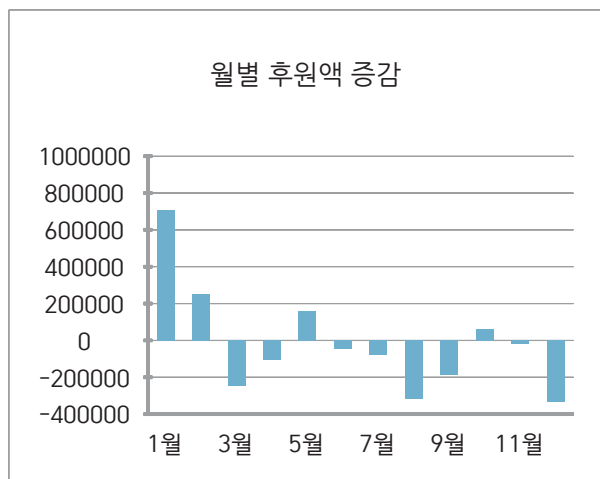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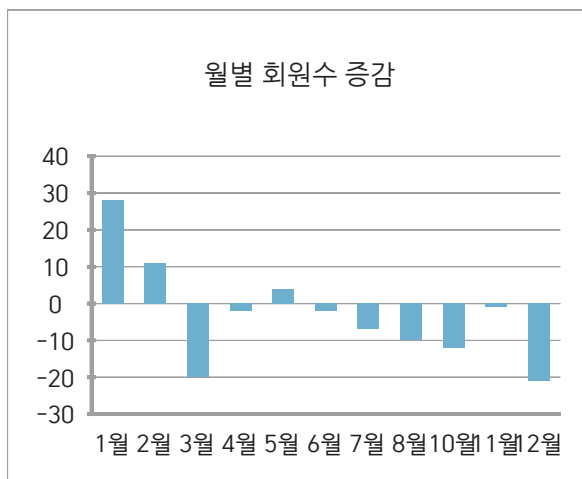
- 계좌이체 : 1,090명 / 카드결제 : 152명
- 가입연도별 현황(현 지점 유지 회원 기준)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44	26	22	26	12	110	48	47	198	265	390	54

2) 2020년 후원회원 월별 변화 추이

월	회원		후원금	
	회원 수 (명)	전월 대비 증가 (명)	월 총액 (원)	전월 대비 증가 (원)
1월	1,312	28	22,051,550	708,000
2월	1,323	11	22,303,550	252,000
3월	1,303	-20	22,058,550	-245,000
4월	1,301	-2	21,951,550	-107,000
5월	1,305	4	22,113,050	161,500
6월	1,303	-2	22,066,050	-47,000
7월	1,296	-7	21,990,050	-76,000
8월	1,286	-10	21,670,050	-320,000
9월	1,274	-12	21,482,050	-188,000
10월	1,273	-1	21,420,050	62,000
11월	1,263	-10	21,402,050	-18,000
12월	1,242	-21	21,067,050	-335,000
(1월)-(12월)	1,242	-70	21,067,050	-984,500

※ 2020년 결산 ('20년 2월과 12월 비교) : - 81명 / - 1,236,500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후원 감소)



2. 서울지방병무청 캠페인

- 더 많은 입대장병들에게 군인권센터를 소개하기 위하여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 앞에서 매주 월요일 입영식을 전후로 입대장병과 입대장병 가족들에게 군인권센터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2019년 8월부터는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는 예비입영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총 70회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2019년 8월부터 실시한 서울지방병무청 캠페인은 25회 실시하였습니다.
-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서울지방병무청 캠페인은 군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 환기는 물론, 예비 입영자의 병무행정 및 징병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입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군인의 기본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 입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을 전하기 위해 군대 내 인권 상황에 대하여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여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가 확산세가 수그러드는 4월부터 7월까지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8월 광화문 집회 이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캠페인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0월에 다시 캠페인을 재개하였지만,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캠페인을 진행할 수 없어 2020년 캠페인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총 16회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 2021년에도 상당 기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상황에서 예비입영자를 다각도로 만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2018년 ~ 2020년 캠페인 가입 현황 (2020.12.31.자 기준 회원유지자는 ()안에 표기함)

2020년	캠페인 가입자 (명)	2019년	캠페인 가입자 (명)	2018년	캠페인 가입자 (명)
1월	0(0)	1월	7(5)	-	
2월	0(0)	2월	6(5)		
3월	0(0)	3월	7(5)		
4월	7(3)	4월	7(6)		
5월	18(12)	5월	4(4)		
6월	23(9)	6월	2(1)		
7월	5(2)	7월	1(1)		
8월	1(1)	8월	5(2)		
9월	0(0), 미 실시	9월	2(2)	9월	4(2)
10월	3(1)	10월	7(3)	10월	20(13)
11월	0(0), 미 실시	11월	14(6)	11월	16(7)
12월	0(0), 미 실시	12월	2(0)	12월	10(5)
합계	57(28)	합계	64(40)	합계	50(27)

- 아래 사진은 2020년도 첫 캠페인을 보도한 언론사의 사진자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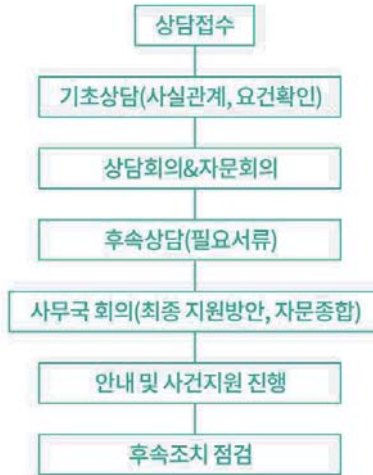


3. <2020년 나눔과 꿈> '원스톱 지원사업' 홍보

- 군인권센터는 삼성전자×사랑의열매의 <2020년 나눔과꿈>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진행을 위해 해당 사업 예산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2015년 제작한 군인권가이드북을 갱신하여 캠페인 현장에서 배포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온라인 홍보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계획을 변경, 4종의 카드뉴스 형태의 군인권 상식 정보지를 페이스북, 트위터, 다음과 네이버 블로그, 해피빈 해피로그를 통해서, 1종의 사업 홍보용 온라인 팸플릿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 아미클 상담절차



본 사업은 SAMSUNG 과 사랑의업에 가 함께합니다

군인권센터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안내

• 구성

기초 치유 프로그램

일상 속 트라우마 트리거 상황 등에서 자신의 심리·정서를 바라보고 돌보는 기초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치유법

중점 치유 프로그램

트라우마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영향을 줄여 나가며 프로그램 참여자 본인이 정한 사회복귀 '목표'를 달성해 가는 치유법

• 방식

일대일 상담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각 핵심참여자의 수준과 속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치유를 진행

•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나눔과꿈 사업에 따라**
치유비는 센터가 지원(단, 기타 경비 자비 부담)

본 사업은 SAMSUNG 과 사랑의업에 가 함께합니다

1. 상담사업

■ 총 386건 (강간 및 유사강간 등 52건, 강제추행 195건, 성희롱 126건, 디지털성폭력 등 13건)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성폭력 상담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상담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으며 성희롱과 강간 및 유사강간(이하 강간)상담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대부분 추가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의 심각성, 긴급성이 요해지는 비상상담소 또한 적극적으로 상담을 비롯한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건들은 여전히 군대의 성인지감수성이 낮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장난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소속 부대 또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방치하거나 사건을 축소하여 피해가 반복되고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거의 모든 성폭력 사건에서 경합되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성희롱은 군대의 성인지감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특히 여군들의 경우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권력관계에서의 낮은 위치성과 직업군인으로서 생존권의 문제와 수치심, 부대에서 떠도는 소문 등 2차가해 염려로 인해 1차 상담 이후 후속 상담을 주저하여 상담이 지속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여군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구제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국방헬프콜(국방부 운영 상담전화)은 일반 인권침해 상담 등에 있어 군인권센터보다 연간 10배 더 많은 상담을 접수하지만 군성폭력 사건 건수는 군인권센터에 비해 적음.

군성폭력상담 기관	군성폭력상담소	국방헬프콜
건수 (2020.1.1.-8.31)	240	19

■ 주요 지원 사건

[1] 준유사강간 사건

(1) 육군 △△△△부대 성폭력 사건: 2020. 1.

2020. 1. 경 가해자는 부사관으로 직접적인 업무 지휘를 하지는 않았지만 상근예비역이었던 피해자와 행정실에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업무를 일정 정도 보조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부

대원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었고 피해자가 평소 아버지처럼 존경하던 상관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유사강간한 사건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사건 초기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긴급하게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방에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실시한 후 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을 사무국 논의 과정을 거쳐 의결했습니다. 피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 진료 경험이 풍부한 병원을 연계하여 의료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법률지원의 경우 피해자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3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가해자를 구속수감한 상태에서 진행된 1심 군사법원에서는 5월, 징역 2년 6월과 신상정보등록을 선고했고 10월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1년 6월과 신상정보등록을 선고했습니다. 전 기간 군사법원 공판을 방청, 사건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입니다.

(2) 육군 0000 부대 성폭력 사건: 2020. 7.

2020. 7. 상담계시관을 통해 피해자의 호소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사회적 지지 자원 등을 파악하고자 면접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부대로 전입한 지 얼마 안 된 상급자였던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부대 적응과 관련한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려심을 악용하여 수회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유사강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군검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건과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에 근거, 동성간 성관계를 이유로 군형법 상 추행죄(92-6)를 적용하여 피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여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상담소는 기 진행중인 형사사건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11월, 배상명령 및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률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심각한 우울감과 PTSD 증상을 보이고 있어 전문 병원과 연계해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유사강간으로 12월 기소되어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추행죄 위반 조사를 받은 건은 피해자가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력에 의한 유사강간 피해를 단지 동성간 성관계라는 이유로 추행죄를 적용하여 수사,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 관련해 법무법인(유)태평양의 공익법재단인 재단법인 동천의 공익법률지원에 따라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강제추행 사건

(1) □□□□ 부대 성폭력 사건 : 2020. 3.

2020. 3. 피해자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면접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법률지원을 결정하여 5월, 피해자법률대리인을 선임, 지원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기병으로 자대배치 직후부터 피해자를 유무형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던 가운데 피해자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한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는 가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불쾌했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유난을 떠는 사람으로 치부될까봐 참았지만 갈수록 심해지자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여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2) 해병 ◇◇◇◇ 부대 성폭력 사건: 2020. 7.

2020. 7. 홈페이지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 가족의 글을 확인한 상담원이 긴급 면접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가해자는 전역한 선임을 비롯한 선임병 4명이었습니다. 흡연장과 샤워장, 복도, 계단, 생활관 등에서 폭행과 위협을 동반한 강제추행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기수열외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발생한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피해자가 자대 배치 받은 후부터 신고하기 전까지 5개월 여 일상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부대에서는 사건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소는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을 결정했습니다. 7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군검찰에서 현역병 가해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11월 시작된 공판은 현재 2회 심리를 진행했으며, 전역한 가해자의 강제추행 사건은 현재 민간 검찰에 계류 중입니다.

(3) 육군 ☆☆☆☆부대 성폭력 사건: 2020. 9.

2019. 12월, 피해자가 전입하면서부터 상관에게 성희롱,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 직접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교제를 강요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실제로도 업무에서 배제한 적 있는,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였습니다. 가해자는 나아가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강제추행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스토키와도 같은 집요한 괴롭힘을 견딜 수 없었던 피해자가 상관에게 보고를 한 후 가해자는 성희롱과 강제추행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복직을 하고자 항고 의사를 밝혔고, 부대에서는 사건이 갈수록 커지자 피해자 닳을 하며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던 피해자가 상담소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사건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소는 피해자법률대리인을 선임, 지원하여 11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관할 민간검찰에 계류 중입니다.

(4) 국군 ▽▽▽사령부 성폭력 사건: 2020. 11.

피해자의 어머니가 상담을 요청하면서 인지하게 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자대배치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선임병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약한 체격으로 인해 성추행 경험이 있어 극복하고자 입대 후 체력 관리에 힘쓰던 중 재차 피해를 입어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습니다. 부대 특성상 가해자와 제대로 분리되지도 못해서 마주치게 되고 회식까지 함께 해야 했던 상황이 되면서 피해자의 불안감이 커진 사례입니다. 사건 초기, 부대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듯했지만 지속적으로 ‘배려’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되자 피해자를 은근히 따돌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상황이 비교적 빨리 종료되었지만 피해자에게는 무엇보다 의료지원을 통한 위기개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전문병원을 연계해 의료지원 중인 상황입니다.

(5) 육군 ○○○○부대 성폭력 사건: 2020. 12.

이 사건 가해자는 부사관으로 직접적인 지휘 감독 관계에 있지는 않았지만 행정병이었던 피해자가 행정실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상관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장난이라며 피해자를 비롯한 병사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가해 당시 매번 장난인 것처럼 말하여 자신보다 어리고 낮은 지위에 있는 병사들을 폭력과 강제추행 상황에 길들였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의 수준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졌고 특히 피해자가 가장 심각한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9월, 마음의편지에 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대대장은 가해자에게 사과를 하라는 말만 하고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병사들을 집합 시킨 뒤 두루뭉술하게 사과를 했고 이후 마음의편지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도리어 폭력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가해자의 폭력과 추행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대담해지자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와 함께 다시 피해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선임 대대장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군사경찰대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2020. 12. 상담소는 피해자 어머니의 호소로 피해자의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소에서 면접상담을 진행하기에는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으로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면접상담 결과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피해자법률대리인을 선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2. 상담소 조직 사업

■ 개요

2019년 창립 이후 상담소 운영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상담소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가 아닌 화상회의를 진행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상담소 운영과 관련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성과입니다.

3.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훈련사업

■ 개요

전년에 이어 군성폭력 전문상담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2기 상담원 양성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상담원 모집과 훈련 과정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안정적인 군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훈련을 위해 교육훈련시설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방식의 훈련과정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제2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

5. 6. ~ 6. 18 기간 동안 총 100시간 33강 17명의 전문 강사진이 교육훈련을 진행했습니다. 1기 과정에 비해 6개의 강의와 5명의 강사진이 증가하여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13명이 교육과정에 참여했으며 11명이 수료하여 2기 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원을 배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대면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 진행해야 했으며 특히 참여수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기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커리큘럼과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함으로써 이후 군성폭력 전문상담원 배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남은 과제로는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 기관으로 자기 정체화하고 이를 널리 알려서 군성폭력상담에 특화, 훈련된 성폭력상담원을 안정적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제2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 과정 커리큘럼]

연월일	과목명	강사명	강사	비고
20. 5. 6.	여성인권과 폭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 5. 6.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이해	정희진	여성학자	
20. 5. 8.	가부장제와 성폭력의 이해	정희진		
20. 5. 8.	성폭력과 여성주의상담의 이해	정희진		
20. 5. 11.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쟁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 5. 11.	인권옹호자로서 상담원의 자세와 윤리	임태훈		
20. 5. 13.	사이버성폭력의 이해와 피해자 지원의 실제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20. 5. 13.	대상별 상담과정-아동성폭력	서재선	서울해바가리아동센터 부소장	
20. 5. 15.	성소수자 인권과 동성간 성폭력의 이해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통 대표	
20. 5. 15.	성산업구조와 성매매 피해의 이해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 대표	
20. 5. 18.	직장내 성희롱과 성차별의 이해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20. 5. 20.	성폭력 관련 법령과 정책(군형법 포함)	이경환	변호사	
20. 5. 20.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실제(민사소송 중심)	이은의	변호사	
20. 5. 22.	성폭력 사건의 현장(서울함을 중심으로)	군성폭력상담소		참여형
20. 5. 22.	상담심리의 이해	김미랑	탁틴내일연구소 소장	
20. 5. 25.	의료지원의 실제-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주혜선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원장	
20. 5. 25.	군성폭력의 이해(군조직 및 군인사체계 중심)	강석민	변호사	
20. 5. 27.	수사 절차와 피해자 지원(군 수사 포함)	강석민		
20. 5. 27.	데이트성폭력과 스토킹의 이해	이은의		
20. 5. 29.	대상별 상담과정-장애인 성폭력	양애리아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소장	
20. 5. 29.	상담 기법의 실제 1(전화상담을 중심으로)	이미혜	소통과치유 공동대표	
20. 6. 3.	상담 기법의 실제 2(면접상담을 중심으로)	이미혜		온라인
20. 6. 3.	역할연습의 실제	이미혜		온라인
20. 6. 5.	성폭력 사건의 현장(일반법원을 중심으로)	군성폭력상담소		참여형
20. 6. 8.	성폭력 사건 상담의 실제 (통합지원체계중심)	조중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연구소 소장	온라인
20. 6. 8.	상담사례 연구1	조중신		온라인
20. 6. 10.	성폭력 대응 법적 절차 및 구제 방식의 이해 (군사법원 포함)	이경환		온라인
20. 6. 10.	대상별 상담과정-군성폭력	김숙경		온라인
20. 6. 12.	상담사례 연구2	조중신		온라인
20. 6. 12.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체계의 실제	고경심	문산광역보건지소 산부인과 과장	온라인
20. 6. 15.	성인지감수성 및 인권감수성 키우기 훈련	군성폭력상담소		
20. 6. 15.	상담일지의 작성 등 실무 연습	김숙경		
20. 6. 18.	성폭력 사건 현장 방문 (고등군사법원)	군성폭력상담소		참여형

4. 정책 사업

■ 개요

일반 성폭력 사건과 달리 군사법체계 속에서 조사, 기소, 재판이 진행되는 군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특히 민간인 피해자의 경우 접근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의 특수성으로 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원스톱시스템을 이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군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사건이 축소 은폐되거나 2차 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국방부의 성폭력 관련 정책 및 훈령, 지침 등을 검토하고 대응해 오는 정책활동을 펼쳤습니다. 상담소가 안착되어 감에 따라 추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 디지털성폭력 군 징계규정 신설

지금까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이하 ‘훈령’) 중 ‘성폭력 징계양정기준’에는 디지털성폭력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N번방 디지털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성폭력의 양상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광범위한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군의 징계 규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군성폭력상담소는 지속적으로 군과 관련한 디지털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징계 기준 보완 등 제도적 개선을 주문해왔습니다.

마침내 국방부가 8월 5일 훈령을 개정하여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자를 징계대상자로 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령에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만 ‘소지’ 시에도 징계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영리, 유포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만 징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상담소는 연령에 불문하고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엄정 징계할 수 있도록 훈령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범정부TF 국방부 포함 촉구

2020년 초 ‘N번방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 전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 넣으면서 디지털성폭력의 심각성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면서 디지털성범죄범정부TF를 꾸렸지만 주요한 협력 부처인 국방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군대 내에서도 디지털성폭력이 갈수록 증가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성폭력의 특성상 신속한 증거확보가 관건인데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군사법체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더구나 현행법상 가해자가 군인일 경우 군사법체계 내에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법권을 관할하는 국방부를 디지털성범죄범정부TF에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5. 홍보 사업

■ 개요

주로 사건 지원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한 건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2020년 N번 방 성착취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가운데 보도자료를 통해 군의 실질적인 성범죄 근절운동 참여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2. 18. [보도자료] 군성폭력상담소에서 제 2기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을 개설합니다.
- 3. 30. [성명] 디지털성범죄 범정부 TF, 국방부는 왜 빠졌습니까?
- 5. 26.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첫 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 설립 1주년 활동 보고
- 6. 24. [보도자료] 간부로부터 수개월 동안 성희롱, 성추행 당한 병사들, 부사관 협박에 신고도 못해
- 9. 1. [보도자료] 해병1사단, 6개월 간 하루 종일 후임병 집단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
- 10. 26. [보도자료]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군 징계 규정 신설을 이뤄냈습니다.

6. 연대사업

전년에 이어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1인시위와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사건 계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UN 특별절차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소 설립 1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가입하여 관련 회의와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주범 중 하나인 일명 이기야(이원호 일병)의 군사법원 공판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군의 디지털성범죄자 대응을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결산

1 수입

과목			일반 후원금 회계	군성폭력 상담소 회계	나눔과꿈 배분사업 회계	OSF재단 배분사업 회계	내부거래 제거	당기결산	비율 (%)
관	항	목							
사업 수익			308,540,716	2,610,000	122,836,192	129,243,861	0	563,230,769	93.8
	기부금 수익		300,561,716	2,610,000	122,836,192	129,243,861	0	555,251,769	92.5
		일반 기부금	300,059,716	0	0	0	0	300,059,716	50.0
		지정 기부금	502,000	2,610,000	122,836,192	129,243,861	0	255,192,053	42.5
	보조금 수익		0	0	0	0	0	0	0.0
		국고 보조금	0	0	0	0	0	0	0.0
	기타 사업 수익		7,979,000	0	0	0	0	7,979,000	1.3
		교육 사업	2,800,000	0	0	0	0	2,800,000	0.5
		연구 용역 사업	5,000,000	0	0	0	0	5,000,000	0.8
		기타 공익 사업	179,000	0	0	0	0	179,000	0.0
사업 외 수익			17,179,293	1,603	20,925	52,743	0	17,254,564	2.9
	기타 사업 외 수익		17,179,293	1,603	20,925	52,743	0	17,254,564	2.9
		예금 이자	86,147	1,603	20,925	45,428	0	154,103	0.0
		잡수익	17,093,146	0	0	7,315	0	17,100,461	2.8
전입금			2,140,991	86,677,969	0	0	-88,818,960	0	0.0
	전입금		2,140,991	86,677,969	0	0	-88,818,960	0	0.0
		회계 간 전입금	2,140,991	86,677,969	0	0	-88,818,960	0	0.0
차입금			20,000,000	0	0	0	0	20,000,000	3.3
	부채		20,000,000	0	0	0	0	20,000,000	3.3
		고정 부채	20,000,000 ⁷⁾	0	0	0	0	20,000,000	3.3
		유동 부채	0	0	0	0	0	0	0.0
당기수입 총계			347,861,000	89,289,572	122,857,117	129,296,604	-88,818,960	600,485,333	1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99,718,780	1,608,260	0	40,172,454		141,499,494	
자금수입 총계			447,579,780	90,897,832	122,857,117	169,469,058	-88,818,960	741,984,827	

7)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영리공익단체 경제적 안전망 용자 사업’ (주관: 서울시, 노사사회공헌기금재단,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선정에 따른 용자

2

지출

과목			일반 후원금 회계	군성폭력 상담소 회계	나눔과꿈 배분사업 회계	OSF재단 배분사업 회계	내부거래 제거	당기결산	비율 (%)
관	항	목							
사업 비용			343,551,999	87,673,195	121,060,768	72,171,196	0	624,457,158	99.7
	일반 사업 수행 비용		79,454,076	0	0	0	0	79,454,076	12.7
		인건비	39,348,723	0	0	0	0	39,348,723	6.3
		인권침해피해지원	21,433,598	0	0	0	0	21,433,598	3.4
		제도개선공익증진	4,532,287	0	0	0	0	4,532,287	0.7
		인권교육	8,840,211	0	0	0	0	8,840,211	1.4
		홍보	4,499,257	0	0	0	0	4,499,257	0.7
		연대	800,000	0	0	0	0	800,000	0.1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사업 수행 비용		4,465,465	86,873,195	0	0	0	91,338,660	14.6
		인건비	4,465,465	86,573,195	0	0	0	91,038,660	14.5
		성폭력 피해 지원	0	0	0	0	0	0	0.0
		연대	0	300,000	0	0	0	300,000	0.0
	열린사회재단 배분사업 수행 비용		2,400,000	0	0	72,171,196	0	74,571,196	11.9
		인건비	0	0	0	43,265,448	0	43,265,448	6.9
		LGBTI군인색출 사건 법률지원	0	0	0	18,218,120	0	18,218,120	2.9
		트랜스젠더강제 전역 법률지원	0	0	0	443,760	0	443,760	0.1
		예비입영자 순회 상담	0	0	0	54,953	0	54,953	0.0
		북한군 인권실태 조사	2,400,000	0	0	10,188,915	0	12,588,915	2.0
	나눔과꿈 배분사업 수행 비용		0	0	121,060,768	0	0	121,060,768	19.3
		인건비	0	0	43,200,000	0	0	43,200,000	6.9
		트라우마치유프로그램 개발	0	0	31,195,523	0	0	31,195,523	5.0
		맞춤형 상담원 체계 구축	0	0	24,824,000	0	0	24,824,000	4.0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보완	0	0	20,498,780	0	0	20,498,780	3.3
		원스톱지원체계 홍보캠페인	0	0	962,465	0	0	962,465	0.2
		자문 및 회의	0	0	380,000	0	0	380,000	0.1
	모금 비용		8,408,345	0	0	0	0	8,408,345	1.3
		인건비	4,634,366	0	0	0	0	4,634,366	0.7
		시민 참여 캠페인	987,879	0	0	0	0	987,879	0.2
		후원 회원 소통	2,786,100	0	0	0	0	2,786,100	0.4
	관리 비용		248,824,113	800,000	0	0	0	249,624,113	39.8
		인건비	143,172,201	0	0	0	0	143,172,201	22.8
		시설 관리	68,344,600	800,000	0	0	0	69,144,600	11.0
		사무 지원	37,307,312	0	0	0	0	37,307,312	6.0

과목			일반 후원금 회계	군성폭력 상담소 회계	나눔과꿈 배분사업 회계	OSF재단 배분사업 회계	내부거래 제거	당기결산	비율 (%)
관	항	목							
사업 외 비용			878,500	0	0	0	0	878,500	0.1
	자산비용		878,500	0	0	0	0	878,500	0.1
		유형자산 매입	878,500	0	0	0	0	878,500	0.1
		유형자산 처분 손실	0	0	0	0	0	0	0.0
		유형자산 손상 차손	0	0	0	0	0	0	0.0
		유형자산 재평가 손실	0	0	0	0	0	0	0.0
		무형자산 매입	0	0	0	0	0	0	0.0
		무형자산 처분 손실	0	0	0	0	0	0	0.0
		무형자산 손상 차손	0	0	0	0	0	0	0.0
	기타 사업 외 비용		0	0	0	0	0	0	0.0
	잡비용		0	0	0	0	0	0	0.0
전출금			86,872,969	3,119,491	0	91,500	-88,818,960	1,265,000⁸⁾	0.2
	전출금		87,872,969	3,119,491	0	91,500	-88,818,960	1,265,000	0.2
		회계 간 전출금	87,872,969	3,119,491	0	91,500	-88,818,960	1,265,000	0.2
상환금			0	0	0	0	0	0	0.0
	부채		0	0	0	0	0	0	0.0
		고정 부채	0	0	0	0	0	0	0.0
		유동 부채	0	0	0	0	0	0	0.0
당기수입 총계			431,303,468	90,792,686	121,060,768	72,262,696	-88,818,960	626,600,658	100.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16,367,586	10,372	1,708,349	97,297,862		115,384,169	
자금지출 총계			447,671,054	90,803,058	122,769,117	169,560,558	-88,818,960	741,984,827	

※ 군인권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수입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고, 직전연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과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회계부터는 자산 5억, 수입 총액 3억 원 초과 단체에 해당하여 법인은 아니지만 공익법인 공시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8) 2021년도 군성폭력상담소 회계 분리(별도 고유번호 발급)에 따른 전출금

2020년 감사 보고

감 사 의 견 서

본 감사는 군인권센터 정관에 의거하여 군인권센터의 202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2020년 사업년도 결산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현재 군인권센터 사무국 운영 및 목적 사업 관련 예산의 집행이 단체의 실정에 맞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군인권센터의 일반회계가 정관에 의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 3. 25.

군인권센터 감사 정정훈

